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 14시 ~ 16시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 설훈 | 김영호 | 이용선 | 배진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희망래일 |
휴전선넘자시민행동

후원 |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협력기관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 통일의병 | 통일농수산 |
전대협동우회 | AOK(Action One Korea) |
평화철도 | 평화의길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 14시 ~ 16시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 설훈 | 김영호 | 이용선 | 배진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희망래일 |
휴전선넘자시민행동

후원 |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협력기관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 통일의병 | 통일농수산 |
전대협동우회 | AOK(Action One Korea) |
평화철도 | 평화의길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목적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함

I 행사 개요

제목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14시 ~ 16시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주최 국회의원 양경숙, 설훈, 김영호, 이용선, 배진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

후원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협력
기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통일의병, 통일농수산, 전대협동우회,
AOK(Action One Korea), 평화철도, 평화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남북민간
교류협의회,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II 정책 토론회

토론회 주제

-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 국회 비준 동의 시민여론 확산 방안

개회행사 14:00 - 14:30

인사말 | 국회의원 양경숙, 설훈, 김영호, 이용선, 배진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동섭** 휴전선넘자시민행동 공동대표

축사 |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주제발표 14:30 - 14:50

좌장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제 |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2018년 남북 정상 공동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종합토론 14:50 - 16:00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식순

ORDER OF A CEREMONY

시간	항목	내용
14:00 ~ 14:30	인사말	국회의원 양경숙 / 국회의원 설훈 / 국회의원 김영호 / 국회의원 이용선 / 국회의원 배진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이동섭 휴전선넘자시민행동 공동대표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인영 통일부장관 /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14:30 ~ 14:50	주제 발표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2018년 남북 정상 공동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14:50 ~ 16:00	종합 토론	좌장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평화의 실천 : 국회의 남북합의 비준동의와 종전 결의”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7.4부터 9.19까지 6대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촉구 범시민운동 방안”

목차

CONTENTS

인사말	
양경숙 국회의원	08
설 훈 국회의원	10
김영호 국회의원	12
이용선 국회의원	14
배진교 국회의원	16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18
이동섭 휴전선넘자시민행동 공동대표	20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2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8
이인영 통일부 장관	30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	32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34
주제발표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38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56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60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62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66
참고자료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서한문	72
1차 기자회견 성명서	74
2차 기자회견 성명서	76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성명서	78



인사말

- 양경숙 국회의원
- 설 훈 국회의원
- 김영호 국회의원
- 이용선 국회의원
- 배진교 국회의원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 이동섭 휴전선넘자시민행동 공동대표

인사말



양경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이 백신 접종 후 일상 복귀를 앞당겨 우리 경제와 삶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설훈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님과 ‘휴전선남자시민행동’ 이동섭 공동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던 모습을 보며 품었던 ‘통일과 평화의 희망’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사그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희망을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과 합의가 회담 이후 이행력을 갖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에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9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본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 토론회가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시민여론을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다져 국회비준 동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통일연구원 박종철 석좌연구위원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상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님,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박우섭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정상합의의 국회비준 동의가 이행될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회의원 양경숙

인사말



설 훈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와 한반도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김영호, 이용선 의원님,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 민화협,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 등과 함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 등 수많은 약속을 해왔습니다. 특히,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이 약속한 합의들은 겨레의 공통된 염원이 담겨있는 중대한 약속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온 겨레가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확고히 담보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철학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동안 한반도는 갈등과 대결의 땅, 긴장과 적대의 공간이 되어 우리 민족은 항상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구체적 방향성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님과 토론 및 발제를 맡으신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님,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훌륭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를 열성적으로 준비해주신 민화협,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북정상합의의 국회비준 동의를 실현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설 훈**

인사말



김영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정상 합의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 개최를 준비해주신 주최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남북관계개선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관계의 경색화 또한 장기화되면서 남북미 관계개선은 일시적인 정체상태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국정 분야 중 하나는 대북정책 분야였습니다. 과학과 논리의 영역이 아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번번이 좌우 이

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성과없는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게끔 하는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근거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거 정상이 합의한 정상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초당적 협력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논란과 이견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논쟁이 아니라 ‘남북관계 제도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회 내에서 여야 간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추진되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남북정상선언 비준 동의안 재추진 동력을 창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회의원 김영호

인사말



이용선 국회의원

남북정상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65년째 지속 중인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양 정상 의지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여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을 견인했던 3년 전처럼 다시금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정이 큰 틀에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 중재자가 되어 평화의 불씨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법적 제도화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른 것입니다. 동·서독이 정부, 의회, 시민단체 등 접촉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비준과 동의로 양국 합

의를 이끌어 갔듯이 평화의 제도화가 항구적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설훈, 김영호, 양경숙, 배진교 의원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님,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에서 이번 토론회를 같이 주최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와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해 평화의 탑을 세우는 그 날까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회의원 이용선

인사말



배진교 국회의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남북 간 신뢰관계는 최악인 가운데, 미국의 새 정권이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지 모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다행히도 싱가포르회담을 존중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북정책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듯한 형식으로, ‘단호한 억지’ 등의 적대적 표현도 함께 내놓으면서, 만만치 않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온 평화 정책을 깊이 돌아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비핵화 우선’ 프레임 안에서 미국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밀 구체적 셈법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전처럼 ‘비핵화 우선’에 갇혀 남북 간 약속 이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평화의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 간에 약속된 평화를 실천으로 증명하는 담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그것이 목적인 양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끝내고, 남과 북이 다시 평화의 주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여섯 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작년 7월, 제가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남북합의문 국회 비준으로 합의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정부의 선언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채 먼지만 쌓이고 있는 남북의 선언문이 다시 가동될 때,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 평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회의원 **배진교**

인사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따스한 봄날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축하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토론회 좌장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남북문제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과 이후 북측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와 남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 간 대화 단절을 시작으로 작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남북 간

의 대화와 만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 합의의 효력이 정권 변화와 외적인 영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적 완결성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데 있어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만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거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간 맺어온 유의미한 공동성명 모두를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이자,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과 8천만 해외동포의 염원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역대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로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할 책무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인사말



이동섭 휴전선남자시민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12월 짝 막힌 남북관계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십여 개 단체와 함께 만든 <휴전선남자시민행동> 공동대표 이동섭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공원에서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고 벅차게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였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몇 말씀만 소개하면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남북 두 지도자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확약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평양시민들, 북한 동포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3년도 안 된 지금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되고 남북은 꿈꿨던 얼어붙었습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정조차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동맹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일촉즉발 아슬아슬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여섯 번의 남북합의 때마다 우리국민은 부푼 기대가 얼마 못가 실망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섯 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국회가 한 번이라도 비준해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냉전시대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7·4남북공동성명’(72)부터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남북공동선언’(2000), ‘10·4남북공동선언’(2007), ‘4·27판문점선언’(2018), ‘9·19평양공동선언’(2018)까지 6개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합니다. 남북합의서가 국회에서 비준동의 된다면,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된 평화와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에 맞서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출발로 남북합의서에 대한 비준동의를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평화의 기반 위에서 안전과 번영의 토대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정파와 정당을 넘어 헌법기관인 의원님께서 국민과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휴전선남자시민행동 공동대표 **이동섭**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축 사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남북은 분단 이후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숏한 고비를 맞았고 지금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단계적 통일과정을 밟는 로드맵을 제시해 지금도 가장 실현 가능한 합의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남북정상 간 이뤄진 합의가 일관되게 지켜지지 못 한 것입니다. 남도 북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양경숙 의원님 등 여러 국회의원님과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준비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을 비롯해 설훈, 김영호, 이용선, 배진교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공동주최에 힘을 모아주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님, 휴전선남자시민행동 이동섭 공동대표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주요 남북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반도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공동번영의 길로 접어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정치 상황 변화는 물론 북미 관계의 변수를 넘지 못해 단절과 대화복원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국회의장 박병석

축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양경숙, 설훈, 김영호, 김한정, 이용선, 배진교 의원님을 비롯한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휴전선넘자시민행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시도였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계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내일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여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국회가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4.27과 9.19 남북정상합의가 비준 동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4.27 3주년 기념식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남북 철도 등 가시적인 협력 시도가 계속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다시금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양경숙, 설훈, 김영호, 김한정, 이용선, 배진교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함께 토론회 개최에 애써주신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님, 그리고 휴전선넘자시민행동 이동섭 공동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정부 역대 5분의 대통령께서 6번의 남북합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4.27, 9.19 공동선언들의 공통분모는 “우리 민족이 교류·협력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남북은 4.27판문점 공동선언과 9.19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를 다짐하였고, 남북철도 조사와 착공식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972년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남북정상 합의사항은 온전히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희미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다짐했던 수많은 역사가 우리의 불씨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행한다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살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이 자리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주시는 내용을 참고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가동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동초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봄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봄을 꿈꾸는 믿음이 평화의 씨앗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욱 노력하여 많은 국민분들께 평화의 봄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현 장
축 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MEMO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

MEMO

축사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안녕하십니까?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최광철입니다.

분단 76년, 종전 68년, 우리 민족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날로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은 유례없이 가혹한 대북제재로 이어졌고 이제 한반도 이슈는 남과 북 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UN까지 당사자로서 깊숙히 개입된 상황입니다. 6.15, 10.4, 4.27, 9.19 등 남북 정상간 굳게 맺었던 소중한 합의들은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어진 남북미 정상간의 회담들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지만 2년3개월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현재 남북미 관계는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만이 한민족 모두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펼쳐나간 우리 정부의 노력속에 남북미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짐을 남북미 당국에게만 지울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과 해외 동포들 모두가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함께 실천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미주동포들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마당에 저희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은 미국의 당당한 유권자의 자격으로 미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간 북미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한국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긴 소통의 노력속에 대북 강경입장 일색이었던 미 연방의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브레드셔먼 의원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선언” 및 “비핵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 제재해제 이슈 등을 상시 소통해 나갈 워싱턴-평양 북미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지난 회기 52명의 의원들이 지지 서명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법안으로서 그 발의 자체 만으로도 북미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의되어 양국의 두 정상계도 실현가능한 대북 외교정책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계적 대북 정책에 대한 미 민주당내 지지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대북 강경 입장이었던 공화당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진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큰 외교성과인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조가 형성되어 가는 듯 보입니다. 이런 미 조야의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희망적인 결과들을 도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2년3개월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며 터널 끝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북미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한국 국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저희 미주동포들도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최광철**



주제발표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2018년 남북 정상 공동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김상준 | 경희대¹⁾

1

근 70년 전 끝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코리아전쟁이 그렇다. 어느 세계인이 보아도 이상한 일이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대부분은 모르고 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한다(“non-sense!”). 지금 평화롭게 지내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 한때 서로 전쟁하던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 끝나고 종전협정 맺고 수교하여 정상관계로 돌아갔다. 당연한 일이다. 동아시아만 해도 한일, 한중 관계가 그렇고, 중일, 미국-베트남 관계도 그렇다. 남은 문제는 미국과 조선(DPRK) 간의, 그리고 한국(ROK)와 조선 간의 관계정상화다.

지난 20년 발목을 잡았던 북핵문제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선과의 ‘딜’을 모색하면서, 미국 측으로써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딜’의 불발 이후 조미 관계는 현재까지 정체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오히려 한조관계다. 북미 관계가 정체상태에 있을 때 코리아 남북이 물꼬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2018년의 세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특히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남북은 정체된 국면을 뚫어가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국의 제약 때문일까? 그것으로 다 풀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모두 내적 자기제약은 없는가?

1) 컬럼비아대 사회학박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2021~)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한차례의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고, 이를 통해 취임 첫해의 남북미 간의 위태로운 파국적 대결이 일단 저지되었으니 취임 시 표방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은 결코 공언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절반의 난관이 남아 있다. 평화는 여전히 얇고 위태로워 보인다.

필자는 2017년 8월의 한 칼럼에서 새 정부가 ‘성공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운전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혹 운전 중에 일시적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정체가 나타나, 잠시 우회하더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최적의 경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동안 문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는가? 되짚어 볼 때이다.

2018년 한 해는 남북, 북미 정상이 연이어 회동하여 2017년의 대결기조를 뒤집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는 교착상태다. ‘일시적 장애물이나 정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예측범위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시적 정체 사태에서 문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가? 과연 “잠시 우회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았고” 꾸준히 “최적의 경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접근해 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결렬된 하노이 회담 이후를 살펴보면 일단 바깥으로 나타난 모습으로는 후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새로운 방식으로 출구를 열어보려는 과감한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게 지지부진 하던 중 2020년에 들어서면 북측에서 (남북 공동선언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거나(6월 16일), 실종 월경 공무원이 사살되는(9월 21일) 등의 돌발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불과 두 달 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 상황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어렵사리 이룬 남북미 간 평화무드가 다시 풍전등화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럴 때야말로 애초의 목표가 어디였는지, 어디인지 다시

금 분명히 해두어야 할 때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필자가 현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표방했던 방향과 목표가 과연 분명한 것인지 최초로 의문을 느끼게 된 계기는 2018년 10월 24일,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3일 판문점-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을 비준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 비준이 ‘국가 간 조약 체결·비준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 6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논쟁’을 걸고 나온 것이 시발이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발전법 조문을 들고나와 (이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절을 준용한 것임)²⁾ 우리는 헌법과 법률상 북을 국가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야당의 ‘위헌’ 시비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던 일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의 일부 중요 보직자들도 헌법 3조와 대법원, 헌재 판례 등을 들어 대변인의 논평을 지원·두둔했다고 한다.

눈앞의 국무회의-대통령 비준을 작은 논리로 변호하고자, 장치의 국회 비준의 큰 당위성을 망각해버린 명백한 실책이었다.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남북의 적 대치가 지속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대응은 새 정부의 기조가 이러한 적대적 대치를 뒷받침해온 각종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가는 데 있을 것이라는 지지층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구나 평양회담 직전인 2018년 8월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사실상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쓴 바 있다. 그의 재임 중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시도도 그러한 소신의 연장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보좌진들 속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배리되는 혼란스러운 발언들이 돌출했던 셈이다. 당

2) 전문에서 남북 ‘쌍방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높은 수준의 남북연합 의식의 표현으로 보는 일부 입장의 오류에 대해서는 김상준(전게서)에서 상세히 분석해둔 바 있다. 그 일부는 본 발제 <참고자료> 2. 참고.

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더욱 자가당착이었다.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요청은 거부하다가, 그 후속합의서의 국무회의-대통령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2018년의 4월의 판문점공동선언, 9월의 평양공동선언과 그 이행합의서는 일괄하여 모두 국회비준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래야 양 정상의 주권적 행위로서의 이 선언이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된다. 촛불 이후의 압도적 민의 역시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국회에서 열세였고, 자유한국당 등 주요 야당은 정부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요청이 거부당하니, 그 부속합의문이라도 공여지책으로 대통령 비준했던 것 아닌가. 그런 전후 사정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엉뚱한 발언들이 나왔다.

큰 정치는 원칙을 따라 큰길을 걸어야 한다. 원칙과 목표가 분명하고, 일관되고 정직해야 한다. 남북미 관계와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야당이 국무회의-대통령 비준에 대한 위헌시비를 걸고 나왔을 때,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현행법이 북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아니다. 국회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여전히 필요하다.

2020년 4.15총선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떤가. 여당은 183석을 얻어 개헌선에 육박하는 다수당이 되었다. 그렇다면 두 선언과 이행합의서에 대한 과반수 국회동의의 걸림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8년 10월 23일 판문점-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이 비준한 이후, 이 시점까지 뚜렷한 진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에서 빼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나 로드맵이 있었던가. 혹 소란스런 내정에 정신이 팔려 중대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역시 ‘미지수’다.

2018년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남북관계는 두터운 평화를 향한 중요한 문턱을 넘게 된다. 헌법 60조를 들고나와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던 야당이 이제 와서 그 절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동의를 통해야 양 선언이 약속한 군사적 대결 완화와 경제적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북(DPRK)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음으로써 생기게 될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성장 활력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합리적 보수'의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무조건적 극단대결과 맹목적 냉전회귀를 부르짖는 정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해 당시 야당인 기민당 역시 용인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시대의 대세를 이해했던 것이다. 남북문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여야합의를 통해 평화기조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그 길이 야당에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3

앞서 말했던 '남북 내부의 내적 자기제약'이란 무엇일까? 남북이 서로를 내전적 적대의 대상으로 간주해온 70년 이상의 제도와 의식의 제약이다. 그 시작은 1948년 남북 두 정부의 수립이었다. 이 당시 두 '정부'는 그 상태가 매우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주권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후 코리아 남북은 3년간 (그 누구도 자신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났다. 아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70년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미소(美蘇) 냉전이 끝난 지 30년인데도 여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948년의, 상대를 불법반란 세력으로 간주했던, 내전적 주권 의식과 제도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내전적 제도와 의식은 이제 남북 모두의 미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한 걸림돌이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것을 오직 미국 탓이요, 외세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2018 남북 정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이러한 내적 자기제약을 풀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아래 내용은 발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제자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1. 코리아 양국체제란 무엇인가?

(김상준, 2019,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33~35, 5~9쪽.)

코리아 양국체제³⁾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 교류, 협력하는 **일 민족 이 국가**⁴⁾의 평화체제, 공존체제이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지난 70여 년 남북 간에 쌓이고 쌓인 적대와 불신을 완화하고 해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

지난 70여 년 남북은 수없이 많은 '통일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통일은 멀어졌다는 역설 속에서 살아왔다. 지금까지 한국과 조선은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한 바 없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통일을 말해봐야 통일이 이뤄질 리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통일하자고 하니까 전쟁까지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통일을 하자고 할수록 통일이 멀어지는 역설이 여태껏 발생해 왔다고 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제1보'가 양측이 상대를 진심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음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가로서 성립되어 있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 그렇듯 진정에서 우러난 실제적인 인정이란 서로를 정당한 주권국가로

3) Two Korean States System. 남북 두 국가를 통칭하는 말로 흔히 쓰는 '한반도' 대신 '코리아'를 쓰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는 한국(ROK)만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조선(DPRK)에서는 '조선반도'라고 한다. 또 '코리아'라 하면 지리적인 Korean Peninsula만 아니라 코리아 사람, 민족(Korean people, nation)을 같이 지칭하니 보다 포괄적이다. 앞으로 양국체제가 정착되어 양국을 통칭하는 언어를 찾아 합의하기까지는 아쉬운 대로 '코리아'를 쓰기로 한다.

4) One Nation, Two States.

서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각자의 내부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적대했던 심리와 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야 편지 한 통 오가는 데서 시작해서, 전화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그리고 마음이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제1보’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코리아 양국체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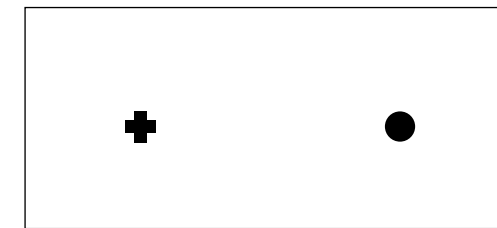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그 ‘제1보’는 한 번도 제대로 떼어지지 못했다.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면서 내달리고 도약하기를 꿈꾸는 온갖 화려한 통일안들이 난무해왔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여태껏 미뤄온 그 첫걸음을 제대로 분명하게 내딛자는 것이다. 통일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양국체제가 정착되고 안정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첫 과정을 제대로 이수(履修)하는 데만 많은 노력과 인내와 창의력이 요구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분명한 목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둔 채 2단계, 3단계로 건너뛰자는 통일안들은 말만 화려할 뿐 실효가 없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만 키워왔다.

양국체제란 단순히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두 국가 간에 ‘국가로서의 상호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그러한 상호인정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비로소 양국체제라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세계 157개국이 남북 두 국가를 동시에 인정하고 수교하고 있으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한반도에 양국체제가 성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막상 남북 두 국가는 서로를 국가로서 정식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으로 적대했던 두 국가가 엄혹했던 냉전 기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상황 탓으로 보아 이해해본다 하더라도, 소련-동구권이 붕괴하여 미소냉전이 해소되고 1991년부터는 남북 두 나라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근 30년을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크게 변하여 이러한 비정상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동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국전쟁(Korean war)의 종전과 북미 수교가 남, 북, 미 3국의 공식 어젠다에 올랐다.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사자가 될 남북 두 국가가 이제 서로를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후 북미·북일 수교가 이뤄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도 남북만은 끝내 상대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채 남아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제 코리아 양국체제가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마리오트 망점 실험을 해보았을 것이다(아래 그림).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그림의 십자 표시를 응시한다. 그리고 눈을 멀리 가까이 하면 어느 지점에서 검은 원이 사라져버린다. 반대로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그림의 검은 원을 응시하면서 거리를 조정하다보면 어느 순간 십자가가 사라져버린다.



지금껏 코리아 남북의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두 나라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그랬다. 한쪽 눈만 뜬 채 상대를 망점 지대에 넣어놓고 서로가 멀쩡하게 존재하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존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조선반도’에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눈을 바로 뜨고 바라보면, 멀리 보든 가깝게 보든, 뒤집어 보든 바로 보든, ‘코리아’에는 엄연히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9년 현재 세계 157개국이 한국(ROK)과 조선(DPRK) 두 나라를 모두 인정하여 동시 수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남과 북 두 코리아는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세계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양

국체제란 두 코리아 모두 정상적인 세계인의 시각을 갖자는 것이다.

코리아의 외눈박이 맹목은 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거꾸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신박을 부린다. 아직도 여전히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항쟁 대열에 북에서 보낸 수백 명의 특수부대(소위 ‘광수’)가 있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망상 허언에 증거가 있을 리 없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와 미국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목의 외눈박이들에게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그래야만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외눈박이 맹목의 당위가 있을 뿐이다. 존재를 부정하는 북과 연결시켜야 5·18 광주를 부정할 수 있고, 그래야 광주 시민들에 대한 피의 살육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외눈박이 맹점 놀음은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지록위마(指鹿爲馬) 뺨치는 외눈박이 맹점 놀음으로 오랜 세월 독재체제를 정당화해왔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항의도, 촛불 집회도, 북과 연결시켜 압살하려 했던 공작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코리아 양국체제란 외눈박이 넌센스, 기만술로 지탱해 온 독재체제, 독재심리를 영구히 종식시켜 정상체제, 정상심리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70년 코리아 남북에 독재체제, 독재심리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이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전 상태’란 하나의 주권, 하나의 영토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필사의 전쟁 상태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하고 극단적인 심리 상태다. 내전 체제는 전쟁 체제고 비상 체제다. 6·25 전쟁 이후 남과 북 사이가 그랬고, 남과 북 내부가 그랬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의 위협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내전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통일 의지와 통일 열망은 오히려 내전 격화와 독재 강화의 불쏘시개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다. 오늘날 코리아가 이러한 내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의 주권, 동일한 영토를 놓고 벌이는 필사의 전쟁상태를 끝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과 조선 두 국가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 시늉이나 속임수로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 상대가 자신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져야 한다. 그

것이 코리아 양국체제다. 그때서야 통일의 길은 비로소 열린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오히려 하나가 되자는 둘이 우선 분명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애당초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자고 다급하게 몰아뒀던 것이 오히려 분란과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돌임을 인정해야, 하나가 되자는 노력의 진실성이 성립한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에 이르는 길이다.

2.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남북 쌍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규정의 한계와 문제

(김상준, 2019,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51~54쪽)

우선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전후하여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미국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일본도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유엔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의 수교국은 증가했지만,⁵⁾ 북의 체제 안정에서 핵심적인 미국과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역시 미국을 따랐다. 국제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는 공인되었지만, 그 출발은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것이었다.

<기본합의서>에서 이루어진 내적 상호인정 역시 불완전했다. 상호인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상대를 어떤 수준에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남북과 같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여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합의서 전문에서는 상호 인정하는 “쌍방”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 규정하였다. 그 결과 3

5)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수교국은 190개국, 조선의 수교국은 161개국이며,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이다. 이 정도면 외교적으로 두 나라 모두 세계로부터 공히 인정받는 정상국가라 부르는 데 문제가 없다. 현재의 남북 수교국 수의 차이는 주로 미국의 강한 영향권 안에 있는 남미(11개국), 아시아(일본과 과거 미국령의 소형 섬나라 11개국), 중동(4개국) 등의 국가들이 북과 수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이들 국가들 역시 북과 수교하게 되고 그때 남북의 수교국 수는 거의 같아진다.

장 25조에 이르는 <합의서> 전체에서 합의 양 당사자를 서로의 정식 국호로 부르지 못하고 ‘쌍방’ 또는 ‘남과 북’이라 애매하게 지칭했다. 합의서 말미에 서명자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라 써서 딱 한 번 양국의 국호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물론 그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 락 김영주”라고 마무리했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 비하면 분명 발전은 발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발전이었을 뿐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앞서 분석한 ‘반쪽국가 의식’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흔히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용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인정의 수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문, 10개조, 그리고 2개조에 대한 추가조항 전체에서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라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은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독일의 동방정책과 관련해서 이와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표현을 조사해본 바로는, 1969년 10월 28일 서독수상 빌리 브란트의 연방정부 성명 중에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 국가는 상호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수한 종류인 것”이라 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성명의 핵심은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뜻이었다. 먼저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특수하다 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one nation, two states) 간의 관계이니 특수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와 전혀 다르다.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여기에다 나라와 나

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까지 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록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양측만으로 종전(終戰)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나치지 못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북과 종전처리를 하고 상호 국가 인정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북 역시 이 기회에 과감하게 국가로서의 상호인정까지 나가자고 제안하지 못했다. 북 역시 ‘남조선’을 곧바로 국가로서 인정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듯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비해 상호인정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갈 방향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이 마치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의 심오한 합의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그러한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높은 민족적 이상에 남북대표가 의기투합한 결과,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려는 속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과잉 해석될 수도 있다(실제 그런 해석이 많았다). 이런 혼란에 빠지면 남북관계가 어디만큼 왔고, 어디가 한계이며,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올바

른 방향을 잡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본조약>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를 주권국가로서 인정함으로써 ‘반쪽국가 의식’을 극복하고 ‘양국체제’로 확실히 이행한 반면, 남북의 <기본합의서>는 서로 체제는 인정하되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절충에 그쳐 ‘반쪽국가 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또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1974년 동독과 수교했다. 반면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 미국은 북의 수교 요청을 거부했다. 동방정책의 서독이 동독과 미국의 수교에 적극 나선 반면, 북방정책의 한국은 조선과 미국의 수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그 이후의 차이 역시 분명하다. 양국체제로의 전환을 확실히 한 동서독은 활발하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루었지만, 낮은 수준의 애매한 절충에 머문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채 1년이 못돼 흔들리기 시작해 곧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3. 어떤 통일이 될 것인가?

(김상준. 2021, 『봉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팽창문명에서 내장문명으로』, 538~542 쪽.)

한국의 여러 역사 교과서들이 아직도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을 동아시아, 또는 한국 근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데는 ‘민족분단의 문제 해결’ 즉 ‘분단 민족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 코리아의 분단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우선 ‘근대’ 개념에 팽창형과 내장형의 구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적은 앞서 남선생이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어요. 코리아 남과 북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면, 남쪽의 대한민국(ROK)나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모두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국민국가’라는 뜻입니다. ‘미완성국가’, ‘반쪽짜리 국가’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요? 지금 한국(ROK)과 조선

(DPRK) 두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함량이 부족한 ‘절반 국가들’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러면 한국을 정상적 주권국가로 인정하여 수교한 190개국과 조선을 정상적 주권국가로 인정하여 수교한 161개국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참고로 그중 157개국은 양국 모두와 수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다, 그렇지만 한국은 확실히 정상 맞지만, 북은 솔직히 함량이 부족 아닌가, 그래서 부족한 북을 끌어안아 통일을 해줘야 비로소 남북이 ‘완전한 국민국가’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역시 과연 그럴까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닐까요? 우선 북이 그런 생각에 동의할까요? 역작용만 생깁니다.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해외의 여러나라들은 모두 그런 식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노르딕 북구나 아프리카, 남미 쪽에 가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우스(south)’보다 ‘노쓰(north)’로 아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동안 남쪽보다 북쪽과 더 교류가 많았던 나라들이죠. 아마 잘 안 믿기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의외라 좀 당황하면서, 아 우리는 ‘노쓰가 아니라 싸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때 ‘아 거기도 잘 안다’고 하죠. 두 개의 코리아를 다 정상국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 남은 정상, 북은 비정상이라는 식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래 1000년 넘게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분단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로만 통일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실제적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통일의지’ ‘통일열정’이 없어서 지난 70년간 죽자사자 적대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현재의 남북의 상태부터 있는 그대로 잘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 아시듯, 지금 북쪽(DPRK)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남쪽(ROK)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국가의 완성’이란 아직 반쪽인 대한민국(ROK)의 완성, 즉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뜻하는 말로 오해될 수 있어요. 지금도 남북이 이런 국명이나 주권개념에 관련한 언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민감한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이든 북이든 아직 국민국가 또는 주권국가로 완성되지 못한 ‘반쪽짜리 국가’라는 의식도 문제고, 또 통일이 남쪽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식으로 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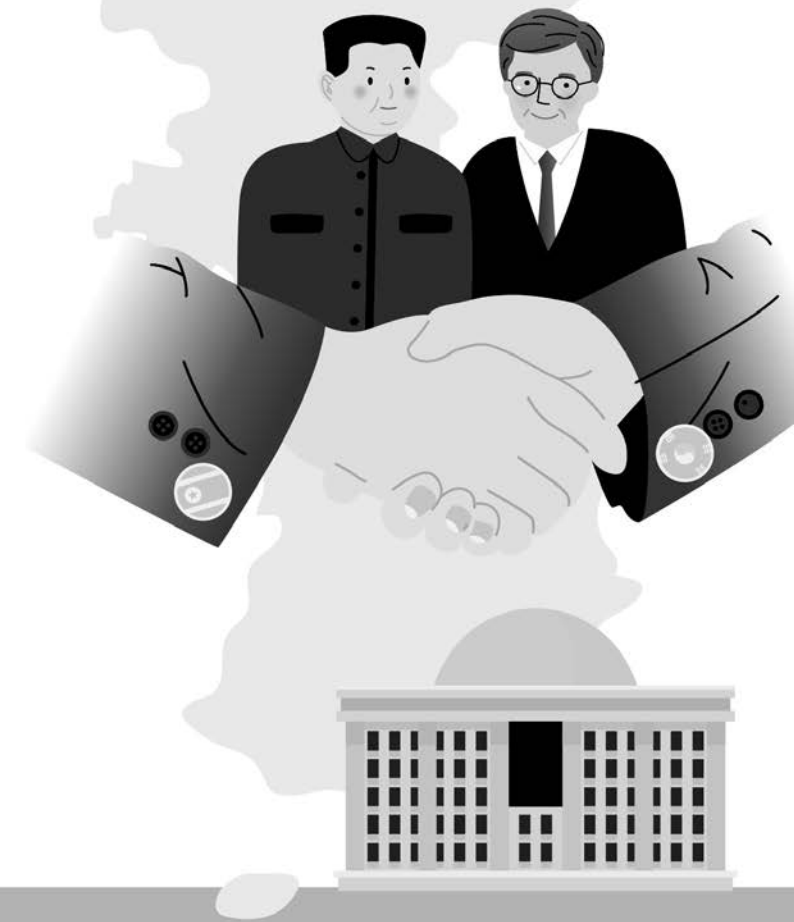
히게 되는 표현도 문제입니다. 정말로 통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층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장애물이 많거든요.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말만 통일을 앞세운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ROK)이나 조선(DPRK)이나 이제 각각이 다 멀쩡히 완성된 근대국가입니다. 그것을 국민국가라 부르던, 민족국가라 부르던 말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얼마든지 두 개의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 남북이 그렇죠. One nation, two states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보세요. 그렇다고 그런 국가들을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국민국가, 민족국가라고 하나요? 두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한 대로 2019년 현재 세계 190개국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161개국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해서 수교하고 있습니다.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입니다. 코리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두 국가는 아직까지도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세계 157개국이 두 국가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이 두 국가는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국민국가의 완성’이 목표라고 쓰고, 다른 쪽에서는 ‘민족해방의 완수’가 목표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할 생각 없이 통일만을 앞세우고 있다면 통일이 잘 될까요?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국민국가의 완성’ ‘민족해방의 완성’만 앞세우다가 6·25전쟁도 터졌던 것 아닙니까? 북선생은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넘어서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실들을 보면 아직도 코리아의 남북 두 나라는 아직 한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후기근대에 코리아 남북 두 국가의 당면한 역사적 목표는 더 이상 문제 많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자면 두 나라가 하루빨리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여 공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서로 국가로서 인정할 때 그 위에 두 국가가 연합이든 연방이든 평화롭게 공존·협력하는 틀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이 2000년 6·15 때 남북 정상 만나 합의했던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의 실체적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6·15 선언에서 두 정상은 그 합의의 전제가 되어야 할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는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구멍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먼저 꿰려고 해서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지요. 일단 밥을 해놓아야 비빔밥이든 볶음밥이든 만들 것 아닙니다. 먼저 남북 두 나라가 서로를 국가로서 상호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남북연합, 연방이 실체화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도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간 충돌을 완충하고 예방하여 세계평화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요. 남북연합, 연방은 그러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연방적 국가로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코리아 통일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통일은 적대적 쌍방의 어느 한쪽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완성’이 아니라, 적대적 과거를 한 단계 높은 통합과 발전의 디딤돌로 전화해낼 수 있는 후기근대의 포용적 연합·연방국가의 출현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 한반도 정세 핵심 이슈

○ 한미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을 바이든 대통령께 정확히 설명
- 북핵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상간 명확한 정리
- 싱가포르 합의 존중
- 김정은 위원장의 4년째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유지 인정

○ 대북전단 문제

- 북측은 표면적으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실제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인식
- 북한 비상방역사령부는 ‘전후복구 정신으로 방역
-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 보강과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

치 정보, 우발적 사태 발생 우려

○ 북중접경지역, 언제 열리는가?

- 북중 최고지도자간 3월 구두 친서 교환에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
- 북중 당국간 코로나 세부 방역시스템 정비 미비

2. 북한의 대응

○ 코로나19와 제재 지속되는 가운데 북측은 최소한 상반기에는 내부 경제 개선에 올인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북중 협력 강화로 돌파구 모색하는 전술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 고난의 행군 시대의 시장화 경험자들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상황 악화를 막고 있으며, 막혀 있던 북중 경협이 서서히 복원될 것임.

○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대남담당비서, 국제담당비서 언급 없으며, 조평통을 없앨 수 있다는 김여정 담화 주목

○ 북측은 8차 당대회 이후 아직까지 전략적 차원의 하나의 길, 하나의 방향으로 대외, 대내 경제문제 등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 대북정책 정리 이후 대미, 대남 전략 방향 설정(하노이 트라우마도 중요한 영향)

3. 남북관계 창 열기

○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관계 교착상태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살아 있다고 봄.

○ 도쿄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적극 활용

-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서울 남북한전(6.7) → 도쿄 하계올림픽(7.23) →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2) 등 잇따르는 빅 스포츠 행사 활용할 필요

○ 백신협력

- 한반도 생명공동체, 동북아 생명공동체 관점에서 남북 백신협력 요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측 반드시 참여시켜야

- 3월 초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70만4000회분을 공급하기로 결정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국가 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대북 백신협력 프로젝트 현실화

○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 등 국회 비준 동의 필요

-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차기 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펼칠 수 있도록 4.27. 9.19 합의서 조기 국회 비준 필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년 10월 23일에 문재인 정부는 9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이에 반해 4.27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나 국회에서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안팎에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비준은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나 역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거부한 보수 야당의 행태도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과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색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한 것이었다. 이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김 위원장에게 어떤 보고를 했을까? 이 질문을 떠올려보면 2019년 이래 남북관계가 지

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이유를 찾을 수 있다.¹⁾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왔고 5개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그 수위를 더 높이려고 한다. 이를 견제해야 할 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방공약으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 건설”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도 계속되었다.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과연 이러한 태도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과 어울리는 것이냐고 말이다.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 노선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고 말이다. 북한의 대남 근친증오(近親憎惡)의 중대 원인이 남한의 대규모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에 있는데, 이들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비준 동의를 거부하는 보수 야당에는 눈을 부릅뜨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를 말이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국방비 절감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욱식,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유리창, 2021년) 참조.

평화의 실천 : 국회의 남북합의 비준동의와 종전 결의

김진향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 : 비핵화 정책의 실패

- 평화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 정책 실패, 교착국면 장기화, 위기 심화
- ‘선비핵화 후평화’의 비핵화 우선론은 분단체제 유지가 목적인 미국 네오콘의 전략,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가 아님.
 - “핵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 결국 남북관계 실패 초래
- 결국 비핵화 정책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분단유지 정책

2. 평화 정책/전략의 부재 : 위기의 원인

- 교착국면 장기화와 위기의 원인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미실천
- 결국 위기 극복과 평화의 해법은 4.27/9.19의 합의의 실천(의지 표명 포함)
- 4.27/9.19 합의의 핵심은 적대 청산으로 상징되는 종전-평화

1)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

-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인식의 오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
- 실질적 평화, 구체적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해야 함.

2) 전략기조 전환 : 안보전략에서 평화전략으로

- 통일/외교/국방의 포괄 개념을 안보로 치환한 것은 분단체제 유지 프레임
 - 안보전략은 평화전략의 하위 개념, 안보는 평화의 수단, 안보의 목적이 평화

-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전략은 결국 분단 유지전략으로 고착화
- 분단의 본질적 속성은 적대 관계 유지의 전쟁 상태(휴전협정 체제)
- 전쟁/분단 체제를 종전(평화)/통일체제로 바꾸어가는 것이 국가 기본전략
 - 안보전략은 분단/전쟁 유지전략, 통일/외교/국방의 기본전략을 종전/평화협정으로, 결국 평화전략이 평화/통일 실현 전략

3. 평화의 실천 : 국회 비준동의와 종전 실천

1) 평화의 포괄적 실천 : 4.27/9.19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 4.27/9.19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자체가 평화의 실천 의지 표명
-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평화의 실천으로써 4.27/9.19의 핵심합의인 종전선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 채택 제안
 - 국회 차원의 종전 결의안을 바탕으로 정부(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동력 확보

2) 평화의 직접적 실천 : 종전 운동(국회 종전 촉구 결의-정부 종전 선언)

- 전쟁 상황(휴전)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 - 전쟁 극복 평화 프레임 필요
 - 전쟁 상황은 국민 불행의 기본환경, 범사회적 구조적 비정상의 원인
 - 종전은 국민행복의 기본환경이자 절대선
 - 8천만 생존권,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쟁 상태 방치는 국가의 기본책무 방기
- 종전은 그 자체가 평화의 직접적 실천이자 구체적 실현
 - 2차 대전, 20세기 이후 가장 오래된 전쟁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 누구를 위한 분단?
 - 국민 생존권을 위해, 국민 주권을 위해 “최소한 전쟁은 끝내자!”
- 종전이 되면 남북의 적대 상황이 끝나고 적이 사라짐
 - 한반도의 종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정상의 국면, 남북이 실질적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더 높은 단계의 평화국면 창출
 - 종전으로 부터 비정상의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평화협정도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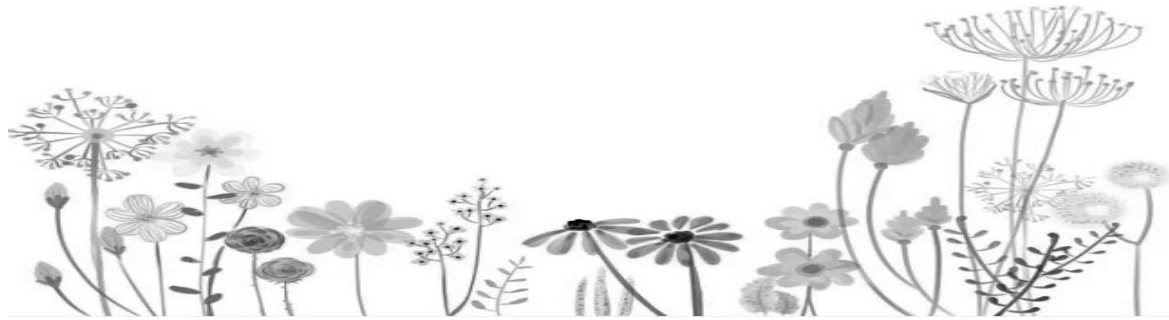
3) 왜 지금 종전인가?

- 종전 문제는 교착상황의 남/북/미 관계 회복의 단초
 -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선언의 공통된 합의
- 종전 문제는 북측이 제시한 평화적 남북관계 복원의 원칙적 해법
 -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노동당 8차 당대회)
- 종전은 포괄적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고리
 - 남북공동선언(6.15, 10.4, 4.27, 9.19) 실천,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한미연합군사훈련), 평화경제(개성공단/금강산, 철도/도로) 실천, 남북교류협력(사회문화, 인도주의협력, 5.24조치 해제) 실천, 이산가족상봉 등 포괄적인 남북관계 전반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초
- 종전은 불평등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
 - :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유엔사, SOFA, 방위비 문제 등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
 - 종전은 8천만의 기본 생존권, 주권적 기본 권리
 - 종전은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권
- 종전 반대 세력이 실질적 분단유지/전쟁 세력
 - 종전 반대세력은 결국 국민주권, 국민생존권, 민주주의 부정 행위, 반공동체/반국민/국가적 행위

4. 종전의 주체/프로세스

- 5천만 국민, 8천만 겨레가 이 땅의 주인된 권리로써 종전을 결의하고 선언하고 실천하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 땅의 주권자로서 종전을 결의하고 종전을 선언한다!
- 형식상 휴전협정 조인 주체인 미국 참여가 필요하나, 미국은 관심 없음.

-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면 우리는 영원히 전쟁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가?
-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
- 국회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며,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산
 -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종전을 결의하고
 - 국회의 종전 결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의회/시민사회 범국민적 종전운동
 - 정부, 공공기관, 학교, 군/경찰 등 온 국민이 주인된 권리로 종전 주장/선언
 - 국회 종전 결의안 채택 후, 남북 국회 공동 종전결의안 추진
- 국회 차원 미국/중국 의회 대상, 국제 의회기구 한반도 종전 결의 외교
 - 국회 주도로 미국/중국 국회 대상 종전 결의안 협력 외교
 - 외교부 전 세계 재외 공관 한반도 종전/평화협정 지지 외교 총력전
- UN 총회 한반도 종전결의안 요청
- 교황청 등 세계적 종교/평화 세력 대상 한반도 종전 지지 요청 운동화 등
 -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장의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



총보다 꽃!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앞당기자

박우섭 |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 7.4부터 9.19까지 6대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촉구 범시민운동 방안

□ 6대 남북 합의 사항

-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 상호 불가침!”
-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연합연방제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자!”
- **10.4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월 4일)**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 **4.27 판문점선언 (2018년 4월 27일)**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9.19 평양공동선언 (2018년 9월 19일)**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촉구 범시민운동 방안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간 약속이 쉽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깨겠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프로세스

- 남북정상합의 비준 동의를 위한 국회 평화 탑돌이
(2021.4.13. ~ 6.19.)
-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촉구를 위한 ‘발걸음 모으기’캠페인
(2021.5.11.~ 국회 비준 동의 될 때까지)
- 클라우드 펀딩
총보다 꽃: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꽃 보내기(2021.4.27. ~ 5.31)

◎ 남북합의 국회비준동의 촉구 범 시민운동 향후 과제

: 왜 국회는 남북정상합의 비준동의를 하지 않고 있나?

- 미국이 반대하는데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강행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 아직 국민정서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우리가 지금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한다 해도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럴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는 바 신중해야 한다.

👁️ 우리 시민운동은 이러한 장애와 의구심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선도 투쟁 vs 대중 투쟁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성과 대국민 보고 중에서



숲 속 나라 동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 오늘은 숲 속 나라의 왕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거든.

“동물의 왕은 역시 사자여야 해. 그래야 품 나지 않겠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힘보다 지혜! 지혜 하면 여우 아니겠어요?”

사자와 여우가 각각 한마디씩 했지. 개미도 개미만 한 목소리로 공약을 말했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어.

어쨌든 투표가 시작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 이루어졌지.

“사자 하나, 여우 하나, 여우 둘, 개미 하나, 개미 둘, 개미 셋, 개미 넷, 개미 다섯, 개미…. 개미…. 개미!”

사자와 여우가 털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어.

“이건 무효야! 어떻게 개미 숫자를 이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서한문 (2021. 5. 20)

1차 기자회견 성명서 (2021. 4. 13)

2차 기자회견 성명서 (2021. 4. 27)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성명서 (2021. 1. 27)

국회의원께 드리는 서한문

_____ 의원님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코로나19 방역은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보통신 강국답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새로운 전환과 도전의 시대를 넘어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문제 중 핵심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전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대화를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남북이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정치권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7·4남북공동성명’(72)부터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남북공동선언’(2000), ‘10·4남북공동선언’(2007), ‘4·27판문점선언’(2018), ‘9·19평양공동선언’(2018)

까지 6개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남북합의서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된다면,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된 평화와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에 맞서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출발로 남북합의서에 대한 비준 동의를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평화의 기반 위에서 안전과 번영의 토대를 쌓아 갈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과 민족의 공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_____ 의원님,

의원님의 생각과 실천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파와 정당을 넘어 헌법기관인 의원님께서 국민과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에 앞장서 주십시오.

조만간 직접 의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희망래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통일농수산, 전대협동우회, 평화철도, 평화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Action One Korea,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성명서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하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1972년 7월 4일.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 상호 불가침!” 1991년 12월 13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연합연방제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자!” 2000년 6월 15일.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2007년 10월 4일.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2018년 4월 27일.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2018년 9월 19일.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자 지난 세월 남과 북이 천신만고 끝에 만든 금쪽같은 합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짝 막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만나 백두산 천지에서 세계만방에 약속했던 ‘평화의 새 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얼음장 위로 살벌한 찬바람만 분단의 동토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정세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오늘 한반도 정세는 서구 열강들이 패권쟁탈전을 벌이던 구한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다툼에 자주성도, 자강력도 갖추지 못한 채 어제는 청나라에, 오늘은 러시아에, 내일은 일본에 기대어 잔명을 부지해보려던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뼈저린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 년 전 지배층들의 어리석고 무능한 처신이 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시켰고, 그 식민지가 분단으로, 분단이 전쟁으로, 전쟁은 다시 분단의 공고화로 이어져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뼈저린 과오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의 새 길을 개척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희망과 환호는 낙담과 탄식으로 바뀌었고, 청사에 아로새겨야 할 선언과 합의들은 한갓 휴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천만 겨레와 온 세계의 면전에서 선언하고 약속한 남북합의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뀔

다 해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깃발이자 나침반입니다.

짝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여는 돌파구는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그 해법은 멀리 갈 것도 없이 4.27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맹신주의와 비핵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우선 실천할 사업으로 결정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민의를 전당’을 자처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묻습니다. 과연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난산 끝에 탄생한 남북정상합의라는 옥동자를 한갓 당리당락의 이용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는 ‘민의를 전당’인 국회가 진작 수행했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다를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눌 수 없습니다. 통일은 말 그대로 정견과 신앙, 정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온 겨레가 하나 되는 일이고,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역사적 위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7.4에서 9.19까지 6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에 당장 나서주십시오. 더 이상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겨레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국회 평화탑돌이를 시작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비원을 담아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1년 4월 13일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희망래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통일농수산, 전대협동우회, 평화철도, 평화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Action One Korea,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성명서 2 7.4부터 9.19까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이룩하라!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한시도 평화로운 때가 없었다. ‘냉전의 대리전’이 되어버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서로 찢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다.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68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가?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불가능한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총 6번의 남북정상합의가 이루어졌다. 50년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6대 남북정상합의의 정신과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고 일맥상통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1972년 7월 4일)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 상호 불가침!” (1991년 12월 13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연합연방제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자!” (2000년 6월 15일)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2007년 10월 4일)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2018년 4월 27일)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2018년 9월 19일)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김정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각각 맺은 남북정상합의 내용은 서로 맥을 함께하며 점점 구체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즉, 남북이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교류·협력하고 민족이 대단결하여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왜, 남북정상합의 비준 동의에 나서지 않는가? 남북 화해·협력·자

주·평화·종전·통일을 원치 않아서인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6대 남북정상합의를 일괄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민의(民意)의 대리인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입각하여 국정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민의를 대변한다. 국회의원들은 남북정상합의를 비준 동의하고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후속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정상합의 내용을 계승하고 실천에 나서도록 법으로써 규정해야 한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4.27선언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라고 써어져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정상합의 비준 동의 촉구 서한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내어 동참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정상합의 모두를 조속히 국회 비준 동의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에 앞장서라.

2021년 4월 27일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희망래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외부, 통일농수산, 전대협동우회, 평화철도, 평화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Action One Korea,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성명서 남북대화 재개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는 평화를 원한다. 남과 북은 조건 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를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정상 합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대화가 이어지던 2018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21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3월과 8월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쟁훈련하면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며 남북대화 의지는 변함없고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또 북한은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며, “북남관계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년은 한반도가 평화냐 대결이냐를 결정할 대분기점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정부와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 군사훈련이 아닌 대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에 선언해야 할 시기다.

우리는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실행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라. 북한도 핵과 무력 증강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 국민 모두는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대화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남북대화 재개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 남북정상 합의 이행 위해 남북대화 재개하라.
- 코로나19 확산 우려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2021년 1월 27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 시민 |

명진 스님, 박종렬 목사, 함세웅 신부, 강경국 강국희 강근정 강병권 강봉원 강석찬 강성민 강성민 강옥천 강원구 강유아 강일향 강재건 강정선 강정옥 강종일 강주수 강창덕 강혜경 강효진 강희석 고은광순 곽해곤 구자우 구자웅 권기숙 권기식 권기태 권순철 권영자 권오선 권유진 권정숙 권창식 권철인 권태영 권향엽 권혁영 권형택 권혜반 김은수 김경미 김경아 김경운 김경중 김기원 김덕일 김덕중 김도순 김도현 김동은 김두현 김만진 김명숙 김명희 김미옥 김미화 김민수 김민철 김범규 김범수 김병경 김병경 김병술 김병술 김병태 김병화 김보섭 김분임 김삼용 김서진 김성곤 김성례 김성복 김성수 김영근 김영미 김영부 김영신 김영애 김영희 김옥선 김용백 김용삼 김용철 김원일 김은희 김인영 김일중 김재규 김재석 김재승 김재진 김정익 김정택 김정희 김종섭 김종운 김종일 김주관 김주동 김진구 김진규 김진원 김창의 김태봉 김하중 김현열 김현주 김호선 노광일 노금선 노성문 노수문 노승석 노태구 문해정 민경서 민혁기 박경숙 박기수 박길수 박두환 박명섭 박미순 박병관 박석두 박선희 박성자 박숙희 박영규 박영현 박완신 박용택 박용훈 박우섭 박운산 박인숙 박인옥 박정곤 박정우 박정옥 박종재 박진후 박치관 박혜경 박희수 방은미 박정훈 배경문 배병호 배성만 배소영 백명수 백왕순 부안리 서금석 서민태 서상섭 서진희 서태원 성효숙 손미희 손병희 손태영 송세경 송재숙 송진의 송창호 송천복 송호순 신동진 신성재 신종권 신현중 심기우 심재룡 심희자 안김정에 안민환 안영주 안정선 안정숙 양재덕 오경길 오명옥 오진계 용명희 우종범 유상균 유영주 유은희 유재흥 유중석 윤기남 윤숙형 윤현수 이창제 이강산 이경규 이경목 이경옥 이경은 이경희 이관수 이광호 이기연 이덕수 이덕희 이동섭 이동용 이래경 이만영 이문상 이미영 이병호 이상 이상근 이상래 이상준 이상현 이석표 이선철 이성재 이성재 이성희 이순모 이순애 이승렬 이승희 이신 이영기 이영배 이영임 이용수 이우준 이원호 이은경 이은정 이인자 이장주 이재곤 이종원 이종희 이지현 이진선 이진수 이충진 이해석 이희숙 임무자 임억기 임우택 임은빈 임진철 임평환 장송희 장신환 장애라 장영달 장원택 장인용 장한우리 전국진 전국원 전우진 전지운 정갑희 정동근 정동실 정명환 정미라 정범진 정봉규 정세일 정순영 정영수 정일용 정재원 정재환 정준채 정진관 정현규 정형철 조강훈 조개돈 조경숙 조대형 조성덕 조원호 조운 조윤범 조종원 조현선 조현수 주진규 주효단 지중훈 진중우 차영조 차우열 차의복 천춘근 최권행 최기동 최덕환 최동근 최병식 최병일 최선희 최순이 최연임 최영 최영선 최용호 최장운 최점복 최정호 최종태 최주현 최혜은 추동균 하준명 하춘성 한기양 한명자 한상원 한서원 한연수 함경숙 홍성미 홍영두 황광석 황보반 황선자 황용태 황정민 황천풍 외 87명
(2021년 1월 26일 오전 11:00 기준 총 428명)

| 시민사회단체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통일외병, 통일농수산, 희망래일, 전대협동우회, 평화철도, 평화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AOK(Action One Korea),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휴전선넘자시민행동
희망래일 | 02-323-5778